

공 개



의안번호	제 74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3. 4. (제 4 차)	

(주)한일진공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3. 4.

## 1. 의결주문

(주)한일진공의 제7기(2016.1.1.~2016.12.31.)부터 제9기반기(2018.1.1.~2018.6.30.)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에 따른 과징금 부과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주)한일진공의 제7기(2016.1.1.~2016.12.31.)부터 제9기반기(2018.1.1.~2018.6.30.)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발견된 위법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 2020.1.22.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정기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려는 것이며, 과징금 부과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함

## 3. 주요골자

### 가. 조치안

위반자	위반내용	조치안
(주)한일진공	정기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과징금 1,325백만원

### 나. 지적사항

#### ☐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기재 위반

- (주)한일진공(이하 '회사')은 제7기(2016.1.1.~2016.12.31.)부터 제9기반기(2018.1.1.~2018.6.30.)까지의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를 공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① 파생상품자산 과소계상 등 (연결 '16년~'17년3분기 27,705백만원~51,864백만원 / 별도 '16년~'17년3분기 30,841백만원~54,770백만원)

- 투자목적으로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를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으로 분리하고, 해당 내재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함에도
- 전체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취득원가로 측정함으로써 파생상품평가이익(당기손익)과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을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함

② 관계기업투자주식 회계처리 오류 (연결 '16년~'18년반기 1,689백만원~7,641백만원 / 별도 '16년~'18년반기 921백만원~7,473백만원)

- 대표이사 및 임직원 겸직 등으로 인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지분을 관계기업투자로 회계처리(연결: 지분법, 별도: 원가법)했어야 함에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관련 평가손익을 부당계상함

#### □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 회사는 증권신고서('17.12.13.)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제7기('16년), 제8기('17년)반기 및 제8기('17년)3분기 재무제표를 사용함

## 4. 참고사항

가. 2020년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필(2020.1.22.)

※ 금융감독원장이 안전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붙임)

(별지)

## (주)한일진공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

금융위원회는 (주)한일진공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및 증권신고서에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한 연결재무제표 등을 사용한 사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에 의하여 과징금 1,325,000,000원을 부과한다.

- 다 음 -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주)한일진공

- 대표이사 : 000, 000
-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00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 본점 소재지 : 00000 000 0000000000 00(000)

### 2. 조치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 (주)한일진공에 과징금 1,325,000,000원을 부과한다.

### 3. 조치이유

#### 가. 지적사항

☐ (주)한일진공(이하 '회사')은 제7기(2016.1.1.~2016.12.31.)부터 제9기반기(2018.1.1.~2018.6.30.)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

○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기재 위반

- 회사는 제7기(2016.1.1.~2016.12.31.)부터 제9기반기(2018.1.1.~2018.6.30.)까지의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를 공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① 파생상품자산 과소계상 등 (연결 '16년~'17년3분기 27,705백만원~51,864백만원 / 별도 '16년~'17년3분기 30,841백만원~54,770백만원)

- 투자목적으로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를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으로 분리하고, 해당 내재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함에도
- 전체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취득원가로 측정함으로써 파생상품평가이익(당기손익)과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을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함

② 관계기업투자주식 회계처리 오류 (연결 '16년~'18년반기 1,689백만원~7,641백만원 / 별도 '16년~'18년반기 921백만원~7,473백만원)

- 대표이사 및 임직원 겸직 등으로 인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지분을 관계기업투자로 회계처리(연결: 지분법, 별도: 원가법)했어야 함에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관련 평가손익을 부당계상함

○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 회사는 증권신고서('17.12.13.)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제7기('16년), 제8기('17년)반기 및 제8기('17년)3분기 재무제표를 사용함

## 나. 근거법규

☐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동법 시행령 제168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등

- 상장법인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하는 사업보고서 등의 재무에 관한 사항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및 제3항

- 금융위원회는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11, 43, 46

-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파생상품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6

- 기업이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경영진의 상호 교류 등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는 것이 입증됨

(붙임)

## 관계법규

###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① ~ ② <생 략>

③ 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 제1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한다.

② 삭제

③ 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이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⑤ ~ ⑥ <생 략>

####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생 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4. ~ 5. <생 략>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2. ~ 5. <생 략>
- ② ~ ⑦ <생 략>

##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회계처리기준의 적용)** ① 법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주권상장법인
- 2. ~ 7. <생 략>
- ② <생 략>

**제8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 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심사한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2. <생 략>
- ② ~ ③ <생 략>

**제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위임 등)** ①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
- 2. <생 략>
- ②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등에 관한 사항
- 2. ~ 5. <생 략>
- ③ ~ ⑦ <생 략>

##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8조(감사보고서 감리의 실시)** ① 증선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감사보고서(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감리(이하 “감사보고서 감리”라 한다)를 실시한다.

- 1. <생 략>
- 2. 금융위·증선위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된 경우

3. ~ 4. <생 략>

② ~ ③ <생 략>

**제51조(조사)** ① 증선위는 감리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질문서·문답서 등에 의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의 요구
2.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
3.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협조요청

② 증선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에 의한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55조(회사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1년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2. 임원의 해임권고 및 관계자의 해임권고
3. 3년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4. 경고 또는 주의
5.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제출 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 <생 략>

**제57조(조치기준)** 증선위가 제53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위법행위와 관련된 금액의 크기 등 중요도에 따라 조치의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행위의 중요도가 일정수준 미만인 때에는 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삭제

**제58조(조치의 가감 및 병과등)** ① 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가 감사보고서 감리결과(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결과 포함) 조치를 받고,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② 제53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2이상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증선위는 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의 질적 특성, 고의성의 유무, 과실의 정도 및 발생원인·결과·방법 등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⑤ ~ ⑥ 삭제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조치의 유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2. 임원의 6개월 이내 직무정지
3. 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4.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 ⑧ <생 략>

**제27조(조치등의 기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동기
2. 위법행위의 중요도
3. 조치등의 가중·경감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생 략>

④ 금융감독원장은 별표 7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양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조치등을 결정하는 경우에 양정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양정기준에서 고려되지 아니하거나 양정기준과 다르게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⑦ <생 략>

**제31조(사전통지)** ① 감리집행기관(과징금 부과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은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피조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등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판단근거를 포함한다)
- 나. 조치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
- 다. 조치등의 내용(감리위원회에 상정될 안전에 감리집행기관이 기재할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및 적용기준(위반동기 등을 포함한다)
- 라. 조치등에 관한 증거자료 목록. 다만, 조치등에 검찰총장등의 고발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와 연락처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 ③ <생략>

**제32조(당사자등의 의견제출)** 당사자등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리집행기관이 조치등을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감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에 문서 및 구두로 감리등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 칙 <제2019-13호, 2019. 4. 3.>

**제2조(조치등에 관한 적용례)**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5조(감리결과의 처리)** ① 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상정을 요청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규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감리·조사결과 조치의 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경우에는 당해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8조(심사, 감리결과 처리)** ① 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처리를 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감리·조사결과 조치의 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사전통지)**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제38조의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규정 제27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조치사전통지서(별지 제34호 서식)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서면에 의한 방법

2.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의 경우)

3.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④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이 사전통지 내용과 달라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개최 전(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의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 전(감독원장 조치의 경우)에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에 맞는 조치사전통지서를 별도로 송부한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② ~ ④ <생략>

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해당 발행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①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한다)

2. ~ 7.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32조(위원회의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의 신고인, 증권의 발행인·매출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그 증권의 발행·모집·매출,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생 략>

2.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3. ~ 6. <생 략>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재무에 관한 사항

5. <생략>

③ ~ ⑥ <생략>

⑦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당시 그 법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및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그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9조제2항·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164조(조사 및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증권의 발행,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생략>

2.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생 략>

③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생 략>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 제428조 및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생 략>

③ <생 략>

④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삭제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집합 투자증권 및 유동화증권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생 략>
3. 발행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 가. ~ 나. <생 략>
  - 다. 재무에 관한 사항
  - 라.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 마. ~ 자. <생 략>
- ② ~ ④ <생 략>

**제138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2.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경고 또는 주의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 ② <생 략>

③ 법 제15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6. <생 략>
7.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8.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9. <생 략>
- ④ ~ ⑥ <생 략>

**제170조(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반기보고서와 분기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68조제1항부터 제4항(제4항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만 해당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8조제3항제7호 중 부속명세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2. <생 략>



② <생 략>

**제175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2.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경고 또는 주의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등 공시에 관련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의 내용을 계량적 위반사항과 비계량적 위반사항으로 구분하며, 그 위반의 정도는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 등에 미치는 영향과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1의2. ~ 3.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3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
2. 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조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는 제외한다.

가.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부과

나. ~ 다. <생 략>

3. <생 략>

② ~ ④ <생 략>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용어의 정의 등)** ① 이 규정에서 적용되는 재무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을 제외한다)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재무에 관한 사항 및 회계에 관한 용어는 외감법 제13조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국내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③ ~ ⑫ <생 략>

##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6조(조사의 실시 등)** ①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2. ~ 5.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9조(조사결과 처리)** ① 금융위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426조 제5항 및 시행령 제3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5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29조 또는 법 제42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후단 생략)

②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④ <생 략>

**제34조(조치기준)**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

1. ~ 3. <생 략>

\* [별표 제3호]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5.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라. 위법행위의 내용이 재무제표의 거짓의 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위 3.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57조에 따른 조치기준에 의한다.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9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파생상품의 정의

파생상품: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이나 기타계약

- (1)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한다.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기타 변수를 말한다. 다만, 비금융변수의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
- (3) 미래에 결제된다.

### 금융상품의 네 가지 범주의 정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 (1)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다.
  - (가)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부담한다.
  - (나) 최초인식시점에, 최근의 실제 운용형태가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으며, 그리고 공동으로 관리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이다.
  - (다) 파생상품이다.(다만,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한다).
- (1-1) <생략>
- (2)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다. <이하 생략>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다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

- (1) 대여금 및 수취채권
- (2) 만기보유금융자산
- (3)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내재파생상품

- 11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이 기준서에 따른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 (1)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부록 A의 문단 AG30과 AG33 참조).
  - (2)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 (3) 복합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한다(즉,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아니한다).
-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한 이후, 주계약이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주계약을 이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주계약이 금융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11A 문단 11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경우,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 (1) 내재파생상품으로 인해 변경되는 복합계약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유의적이지 아니한 경우
  - (2) 유사한 복합계약을 고려할 때, 별도로 상세하게 분석하지 않아도 내재파생상품의 분리가 금지된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 이러한 복합계약의 예로는 차입자가 상각후원가에 근사한 금액으로 중도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내재된 대출채권을 들 수 있다.
- 12 이 기준서에 따라 주계약과 분리되어야 하는 내재파생상품이 취득시점이나 후속 재무보고기간말에 주계약과 분리하여 측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다. 이와 유사하게, 복합계약을 당기손익인식항목의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 분리되어야 하는 내재파생상품을 별도로 측정할 수 없다면, 그러한 재분류는 금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계속 분류한다.
- 13 계약조건에 기초하여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예: 동일한 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즉 수준 1 투입변수)이 없는 지분상품에 기초하는 내재파생상품)에는 복합상품의 공정가치와 주계약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로 결정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단 12를 적용하여 복합상품 전체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다.

AG30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은 예는 다음과 같다(문단 11(1) 참조). 이러한 예가 문단 11(2)와 (3)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1) ~ (5) <생략>

(6) 전환채무상품에 내재된 지분전환특성은 채무상품의 보유자 입장에서 주계약인 채무상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발행자의 입장에서는 지분전환옵션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따라 지분상품 분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지분전환옵션은 지분상품이며, 이러한 지분전환옵션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7) ~ (8) <생략>

## 측정

43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취득(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차감)하여 측정한다.

## 금융자산의 후속 측정

45 금융자산의 최초인식 후의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을 문단 9에서 정의한 다음 네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한다.

-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2) 만기보유금융자산
- (3) 대여금 및 수취채권
- (4) 매도가능금융자산

위의 범주는 이 기준서에서 측정과 당기손익의 인식에 적용한다.

46 최초인식 후 파생상품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여기서 공정가치는 매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원가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다음의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1) 문단 9에서 정의한 대여금 및 수취채권. 이러한 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 (2) 문단 9에서 정의한 만기보유금융자산. 이러한 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 (3)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과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부록 A의 문단 AG80과 AG81 참조). 이러한 자산은 원가로 측정한다. <이하 생략>

AG80 (1) 금융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범위의 편차가 유의적이지 않거나  
(2) 그 범위 내의 다양한 추정치의 발생확률을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고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동일한 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즉 수준 1 투입변수)이 없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와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문단 46(3)과  
47 참조)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AG81 동일한 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즉 수준 1 투입변수)이 없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와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문단 46(3)과 47 참조)의 합리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범위의 편차가  
유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은 많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외부  
당사자에게서 취득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범위가 유의적이고 다양한 추정치의 발생확률을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없다면, 그 금융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없다.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30 문단 29(2)와 29(3)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차이의 정도를 스스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다음에 포함한 정보를 공시한다.

- (1) 해당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공정가치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다는 사실
- (2)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장부금액,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이유
- (3) ~ (5) <생략>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91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의 사항을 평가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시한다.

- (1) 최초 인식 후 반복적으로나 비반복적으로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경우에, 가치평가방법과 그러한 측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
- (2)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수준 3)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 중 그러한 측정치가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에 미친 영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2 이 기준서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모든 투자기업에 적용한다.
- 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관계기업: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

지분법: 투자자산을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에는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에는 피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유의적인 영향력: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그러나, 그러한 정책의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니다.

- 5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예: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대로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예: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투자자가 해당 피투자자의 주식을 상당한 부분 또는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기업이 피투자자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 6 기업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는 것이 입증된다.
- (1)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 (2)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 (3) 기업과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 (4) 경영진의 상호 교류
  - (5)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 20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그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이 매각될 때까지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매각 이후 잔여 보유

지분이 계속해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해당하여 지분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40 문단 38에 따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손실 인식을 포함하여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자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 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한다.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 10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다음 (1), (2), (3)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한다.
- (1) 원가법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방법
  - (3)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 6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
- 7 상기 문단과 같이 분류하기 위해서는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 8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려면 적절한 지위의 경영진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계획을 확약하고, 매수자를 물색하고 매각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 진행을 이미 시작하였어야 한다. 또한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현행 공정 가치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문단 9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며,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아 그 계획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아야 한다.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주주의 승인(그러한 승인이 요구되는 국가의 경우)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 15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회계조사국
연 락 처	02-2100-2695	02-3145-7301